

연구논문

한국 인문진흥정책기구 형성의 논리와 대안에 관한 연구¹⁾

이 병 랑 · 전 영 평

최근 인문학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 때문에 인문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 학문영역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이 정부개입을 곧바로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인문학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그러한 이유를 인문학이라는 학문의 한 영역이 지니고 있는 공공재(public good)로서의 특징에서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논문은 현재 한국에서 인문학에 대한 공적 개입 및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평가하고, 앞으로 한국에서 인문학 진흥을 위한 공적 지원체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할지 모색하였다.

주제어 : 인문학, 인문학 위기, 인문학 진흥정책, 공공재

이병랑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순천대학교 법정부행정학전공의 전임강사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문화정책, 행정철학, 예산론 등이다.

libertas@sunchon.ac.kr

전영평

University of Georgia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대구대학교 도시행정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규제정책, 환경정책, 장애인정책 등이다.

ypchun11@hanmail.net

1. 서론

최근 몇 년간 한국사회에서 가장 절박한 위기를 호소하는 분야가 학문의 영역이라는 평가는 지나친 과장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위기에 대한 논란은 학문 전반에 관한 추상적 논의에서부터 대학이라는 제도 자체가 직면하는 구체적 현실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런 위기론은 전 학문영역에 고루 걸쳐 이른바 '이공계 위기'나 '이보다는 덜 두드러져 보이지만 '인문학의 위기' 등의 형식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들 위기론이 모두 위기의 해소에 정부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주장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학문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정부의 개입을 곧바로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 특히 이공계와 같이 국가발전의 지체와 직결되는 것이 명백해 보이는 학문의 영역과 달리 이른바 문·사·철과 같은 인문학의 영역은 전통적으로 대중적 인기나 현실의 변화와는 다소간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 학문분야인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학문의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는 대학을 살펴보다라도 이런 점은 명확히 드러나는데, 경영학이나 법학,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실용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몇몇의 학문분야가 최고 인기학문의 위치를 구가하는 것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현재의 대학제도와 치열한 사회적 경쟁을 고려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이와 같은 학문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전공하려는 것도 비난할 수 있는 일만은 아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현재의 한국사회가 추구하는 시장원리를 반영하는 것이고,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즉, 학생들이나 학자들)도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 인문학의 급박한 위기가 학문 자체의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공적 문제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인문학을 전공한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이런 위기론들은 많은 경우 정부개입의 논리적 근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생략한 채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고 있다(김진나·박주식, 1999; 도정일, 1999; 이동철, 1999; 최재목, 2000; 한승동, 2001; 손영식, 2001; 이상엽, 2001).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인문학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그러한 이유를 인문학이라는 학문의 한 영역이 지니고 있는 공공재(public good)로서의 특징에서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논문은 현재 한국에서 인문학에 대한 공적 개입 및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평가하고, 앞으로 한국에서 인문학 진흥을 위한 공적 지원체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할지 모색하고자 한다.

2. 인문학 · 인문학의 위기 · 인문학의 공공성

인문학을 진흥하기 위한 공적 지원체계가 필요한 이유는 우선 현재 인문학이 처한 위기상황의 심각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인문학이 위기상황에 처해있다는 사실이 인문학 진흥을 위한 공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직접적으로 연관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인문학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점이 논리적 · 현실적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문학이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설득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인문학의 위기

인문학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위기는 어느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1) 위기의 현상과 내용: 인문학 연구의 기반붕괴

인문학 위기의 징후는 인문 교과목의 인기 하락, 인문전공 학생의 수적 감소와 이로 인한 학과간의 통폐합, 이런 현상의 논리적 귀결로서 인문학 교수 수의 감소와 인문학 전공연구자의 취업률 급감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조지형, 2001: 155~156; 이종수, 2001: 160). 이는 2002년 발표된 서울대학교의 인문학 전공 석 · 박사과정 입학정원 감축 결정²⁾으로 극적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인문학이 처한 위기의 상황이 급박한 것이라는 경고등이 켜진지 오래임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효과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04년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학입시제도보다 더 심각한 한국의 교육 및 학문의 문제가 기초학문의 기반붕괴일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기초학문의 기반붕

과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분야가 바로 인문학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학부제의 적용을 받는 2002년 입학생의 전공배정 결과 인문대의 경우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국어국문학과를 제외한 모든 전공의 정원이 미달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학부에서의 인문학 기반붕괴는 당연히 대학원 이상의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석사과정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전공 네 분야가 불문학과, 독문학과, 국사학과, 철학과로 모두 인문학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문학 분야의 경우에

(단위: 명)

표 1
서울대학교 전과
(모집단위 이동) 현황

대학명	2002				2003				2004			
	입학 정원	전 입	전 출	소계	입학 정원	전 입	전 출	소계	입학 정원	전 입	전 출	소계
인문대	335	4	41	45	335	6	43	49	335	15	51	66
사회대	430	24	21	45	430	28	20	48	430	32	18	50
경영대	200	20	3	23	200	15	2	17	200	19	2	21
법 대	205	50	-	50	205	50	-	50	205	41	-	41
자연대	371	11	9	19	375	3	8	11	360	4	10	14
생활대	125	2	7	9	125	-	10	10	125	1	6	7
약 대	35	-	-	-	35	-	-	-	35	-	-	-
공 대	950	41	47	88	950	47	45	92	950	26	33	59
농생대	321	-	22	22	321	-	19	19	321	-	13	13
수의대	50	-	-	-	50	-	-	-	45	-	1	1
미 대	120	-	1	1	120	1	-	1	120	2	1	3
음 대	54	1	1	2	54	1	3	4	54	-	2	2
간호대	70	-	2	2	70	-	1	1	70	-	2	2
합 계	3,266	153	153	306	3,270	151	151	302	3,250	140	140	280

자료: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조배숙, 서울대학교 국정감사 질의서(2004. 10. 18).

는 단 한 명의 박사과정 신입생도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이인영 홈페이지의 국정감사 브리핑, www.iloveguro.or.kr).

이에 더하여 인문학 분야는 학생의 전공 선택권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과거보다 완화된 조건에서 실시되는 전과제도를 통해서도 그 학문적 기반이 붕괴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2년 이후 서울대학교의 전공별 전과현황을 살펴보면 인문대는 전입학생에 비해 전출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은 단과대학이었다. 인문대학의 학생유출은 최근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이 시행되는 자연대나 공대 등의 이공계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 같은 인문학 전공 학부생 및 연구자의 감축은 인문학 연구의 기반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기반의 붕괴는 사회적 차원에서도 인문학적 기초나 교양의 붕괴라는 암울한 미래상과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위기의 원인: 국가교육정책의 실패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경우에 따라서는 인문학자의 직업적 위기 혹은 학제적 편성에 의해 인문학을 담당하는 대학의 위기를 인문학의 위기로 대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 인문학자나 인문대학의 위기가 궁극적으로 인문학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위기의 구체적 양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코 도외시킬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물론 이런 위기를 자초한 근본적 원인은 한국의 인문학이 스스로 현실과 괴리되어, 이른바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고유의 학문적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데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염재호·최호철, 2002: 2).³⁾

그러나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심화된 인문학의 위기는 인문학자들의 한국 인문학이 지니고 있는 내적 문제에서만 그 원인을 찾기에

는 너무나 심각한 외적 환경의 변화가 동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는 오히려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정보사회 및 국제경쟁 체제에 따른 효율성·시장성·실용성·사용가치성·전문성 등에 적합하지 않거나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인문학의 시대착오적 혹은 시대지체적 성격과 학문세계의 주변화로부터 연유하고 있다(조지형, 2001: 156). 이처럼 경제적 효율성과 경쟁력을 모토로 참여화되는 국제적 자본주의 경쟁에 직접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인문학이 주변화되면서, 가뜩이나 취약했던 고등교육정책에서 인문정책의 입지는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목표로 진행된 대학개혁은 표면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전공선택의 자유를 주고, 대학원 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이루려는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 결과는 학문간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과 경쟁력이 없는 학문을 퇴출시키거나 위축시키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염재호·최호철, 2002: 3~4).⁴⁾

이처럼 외적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한 국가의 고등교육정책 변화에 의해 촉발된 인문학의 위기는 이제 인문학 내부의 자성이나 노력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에 처한 인문학이 본연의 학문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적 지원체계의 필요성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국가에 의해 주도된 고등교육정책의 실패나, 최소한 편향을 시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공재로서의 인문학

근대 인문학의 발전을 주도해왔던 서구의 선진제국은 인문학이 지니는 '공공재'⁵⁾로서의 성격에 일찍부터 주목하였다. 이런 인식은 실제의 정책으로 이어져 이들 국가들은 인문학을 비롯한 기초학문을 중요시해 온 오랜 학문적 전통과 다른 차원에서 정부차원의 공적 지원체계를 통해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⁶⁾

(1) 인문학의 학문적 성격

단순하게 정의하자면 인문학은 '인간'에 관한 학문인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인문학의 쇠퇴는 인간쇠퇴의 한 증표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김우창, 1999: 5). 인간에 대한 학문으로서의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상적 인간성의 양성에 대한 관심이 있는 곳에서라면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해왔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인문학에 대한 최초의 정의는 고대 그리스에서 나타났는데, 이때의 인문학은 젊은이들을 도시국가의 건전한 시민으로 키워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통은 고대 로마에서도 이어져 라틴어의 'humanitas'는 언어적 지성과 함께 실천적 지성을 갖춘 이상적 인간으로서의 웅변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⁷⁾ 이로부터 사람다운 삶을 확인하고, 이의 실현을 추구하려는 인문학의 교육론적 이념은 주로 말과 글의 훈련, 보다 현대적으로는 문학적 훈련을 통하여 현실을 반성적으로 비판하는 방법론을 취하게 되었다(김남두, 1995: 10; 박찬길, 2001: 22; 이영호, 2003: 13).

인문학이 강조하는 이 같은 텍스트와 이를 통한 세계에 대한 비판적 이해는 고대 그리스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여전히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인문학적 비판적 사유과정에서는 고전뿐만 아니라 실용적 문서, 논문, 인간이 남긴 다양한 형태의 기록들, 더 나아가 인간들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 그리고 그들이 만지고 느끼고 보는 세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텍스트가 될 수 있다. 인문학적 사유와 이성인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하고 거대한 텍스트들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풀어야 할 문제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준다(홍성욱, 2000: 221~224). 이는 다른 어떤 학문에 서도 기대할 수 없는 인문학 고유의 학문적 가치이자, 존재이유인 것이다.

(2) 지식기반사회와 인문학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인문학의 방법론과 이념적 지향이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그리고 감지하고 측정할 수 있는 결과를 제일의 원리로 삼는 현대의 세계에도 적합한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곧 인문학이 제일의 학문이라고 하는 주장이 수사적 차원이 아닌 현실적이고 현재적인 의미에서도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기도 한다. 사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분히 가치지향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모범적 해답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선 최근에 강조되는 논의로서 인문학 자체가 경제적 효과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문학은 지식기반사회라고 하는 현실세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의 차원에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근거에는 정보화시대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하는 문화산업의 경제성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얼마나 다양한 문화적 가치와 재화를 생산해낼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판단이 담겨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문화산업의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기반사회가 정보통신이라는 수단이 아닌 거기에 담긴 콘텐츠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때, 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문학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요약하자면 인문학은 문화의 위상이 높아지는 21세기 산업경쟁력의 기초라는 것이다(김동노, 2002: 10).⁸⁾

그러나 지식기반사회의 의미는 이처럼 제한적 범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지식은 단지 정보산업이나 문화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부문에만 적용되는 수단이 아니라 국가 및 세계발전의 원동력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세계사적 발전이 현단계에서는 토지나 자본, 노동과 같은 산업자본주의적 생산수단이 아닌 정보와 이를 인간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결합한 지식이라는 생산수단에 의존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지식은 시민 개개인과 일 국가 경제 전체의 제 1차적 생산요소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이다(황성돈, 2000: 천정미,

2002: 183~184).

이런 현실세계의 패러다임 변화는 곧바로 각국의 국가전략에 반영이 되어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서구의 선진국들도 지식과 정보, 창의성의 중요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다. 당연히 이는 산업사회의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역시 지식정부로 전환하겠다는 한국의 21세기 국가발전전략으로도 고스란히 수용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식기반사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를 의미하는 것인지, 지식정부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야 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황성돈, 2000).

인문학은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국가발전전략의 내용을 채워가는 학문적 기초이자 방법론적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된다. 이는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을 이루는 지식이 바로 언제나 사람 속에서 구현되고, 사람이 갖고 다니며, 사람에 의해 창조되고, 증대되며, 개선되는 것이기 때문이다(천정미, 2002: 187~188). 그러나 이 지식은 단지 개개인이나 특수한 지역이나 제한된 집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호존중의 바탕 위에 소통되고, 이해되며, 공유되는 성격을 지녀야만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인문학은 이처럼 사람에 관한 지식을 창조하는 학문적 기초로서, 그리고 이런 지식의 소통과 이해와 공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성적 사유와 창의성의 방법론적 근거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3) 사회적 문제해결의 기초로서 인문학

인문학의 중요성과 가치는 단지 경제적 효과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인문학이 환경의 변화와 관련 없이 지니는 중요성은 오히려 인문학이 지니는 학문적 본령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문학은 인간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인간간의 관계와 그로부터 제기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준다. 인문학이 지니는 이런 창조적 실용성은 한 기업경영자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오늘날의 경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독립적이고 창조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불완전하고 변하고 모호한 환경에서 기능할 줄 알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때 결정을 내릴 줄 알고, 협상하고 타협하며 위협을 무릅쓸 줄도 알아야 하고, 정량적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단기목표와 장기계획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명백한 것과 단지 주관적인 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하며, 동료와 효과적인 작업관계를 맺을 줄 알아야 하고, 사람을 고무시키고 갈등을 해결할 줄 알아야 하며, 정보 네트워크를 잘 만들 줄 아는 능력이 다. 이것은 모두 인문교육에서 육성되는 능력들이다(Sturman, 1996: 57~58; 홍성욱, 2000: 228~229에서 재인용).

인문학이 지니는 이 같은 창조적 실용성은 경제적 발전과 이에 의해 추동된 물질적 진보의 필연적 귀결인 인간사회의 복잡화와 이로 인한 인간과 사회의 개체화와 대립이라는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해결의 수단이 될 수 있게 한다.⁹⁾

인문학과 예술의 창조적 힘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강화시킨다. ... 예술과 인문학에의 참여는 인간의 창조적 잠재력을 일깨우고, 우리를 개체화된 개인주의를 넘어 타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역사, 문학, 윤리학 및 예술은 개인을 공동체와 연결시켜 주어, 사회적 분열과 개체화를 극복할 수 있는 인간적 조건에 대한 교훈을 제공한다. 건전한 시민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민주주의적 체계는 예술과 인문학을 필요로 한다. ... (그러므로) 예술과 인문학은 시민사회의 추동력인 동시에 창조성과 다양성, 상상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발성과 자유의 핵심이다(Creative America의 Preface: 필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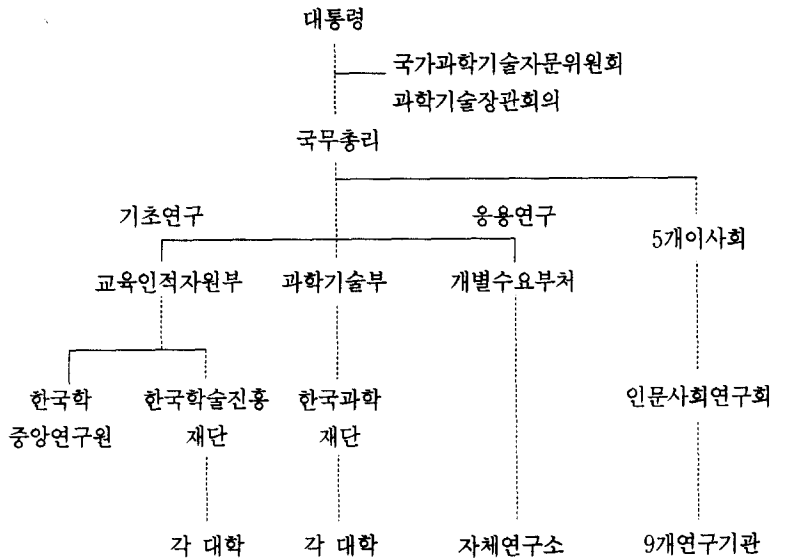
인문학이 지니는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적 도구이자 가치(박경하·전영평·이종수, 2002: 17), 더 나아가 사회적 다양성과 창조성, 그리고 이를 보장할 자유와 민주주의의 핵심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이를 위한 공적 지원체계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이 “우리의 경제는 많은 수치들과 통계들로 측정되어왔고, 이는 매우 중요하기도 하다”면서도, 그러나 “국가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는 공통의 가치와 원대한 정신이 근저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예술과 인문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줄여나가는 대신 그것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믿는다”(Creative America의 Preface: 필자역)고 한 말의 의미는 이 같은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3. 한국의 공적 인문학 지원체계의 현실

한국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문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는 <그림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1
한국의 학술연구지원체계



자료: 한영환·임천순·김남두·이종수(2001), 《인문학진흥을 위한 연구추진체계》의 내용을 수정함.

이처럼 한국의 학술연구지원체제는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학술진흥재단과 과학기술부 산하의 한국과학재단이라는 연구지원기관을 중심으로 기초연구가 지원되는 한편으로는 개별 부처가 자체연구소를 중심으로 응용연구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인문학에 대한 공적 지원은 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산하단체인 학술진흥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의 인문사회연구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1) 인문사회연구회

‘인문사회연구회’는 1999년 1월 29일 공포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 법의 시행령에 의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5개의 연구회 형태로 재편성하면서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의 지원·육성기관의 하나이다. ‘인문사회연구회’는 동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제사회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와는 달리 “국가적 중요성을 가지는 인문학과 사회과학분야에 대한 소관 연구기관들이 연구의 전문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계·학계·연구계와의 협동연구를 통해 정부 및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체제를 갖추도록 함께 노력(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인사말, 홈페이지 www.kchsri.re.kr)”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범하였다.

그러나 ‘인문사회연구소’는 현재 그 명칭이 무색하게 산하에 인문관련 연구기관을 두고 있지 않다. 현재 ‘인문사회연구소’ 산하에 소속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총 9개로 ‘통일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이다. 이러한 상황은 1999년 8월 11일 제 206회 임시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기된 “인문학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당시의 연구회 이사장이 “인문사회연구회에 인문관련 연구기관

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인문학 위기현상을 진단하고 정책방안을 만들어 정무위원회에 제출할 것(강조-필자)”이라고 답한 상황이 그래도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박경수·전영평·이종수, 2002: 21).

현재 ‘인문사회연구회’가 인문학의 진흥이나 지원을 위해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산하에 설치된 ‘인문정책연구위원회’가 ① 인문학 위기의 원인규명 및 인문학 연구, 교육, 활용상의 대안 발굴, ② 연구 관련 사업으로서 심포지엄, 전문가 포럼,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국민의 인문연구 관심제고, ③ 인문연구진흥을 선도할 수 있는 인문연구지원 및 추진기관의 모색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인문정책연구사업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용역과제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1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실시되는 이 사업은 그러나 2003년 ‘인문사회연구회’ 전체 예산인 583억 2,800만 원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액수로서, 이를 통해 인문학의 위기상황 진단, 인문학 활용 대안 발굴, 국민의 인문연구 관심제고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되는 형편이라 할 수 있겠다.¹⁰⁾

2) 학술진흥재단의 인문학 지원체계

‘학술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1981년 설립된 학술진흥재단은 인문학뿐만 아니라 학술진흥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관장하는 교육인적자원부 산하단체이다. 학술진흥재단은 “학술의 연구 및 국내외 교류와 협력 등 학술활동을 지원육성”하고, “학술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신진연구인력을 양성하여 학문 전반의 연구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학술진흥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은 한두 가지로 요약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 www.krf.or.kr의 일반현황 참조).

5,377억 7,800만 원으로 책정된 2004년 예산 가운데 사업비로 사용될 예산은 크게 재단사업비와 위탁사업비로 나뉘는데, 각각 2,42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이루어져 재단 자체의 사업과 정부의 위탁사업

을 수행하게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재단의 자체사업은 대부분이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사용되고 있고(약 2,361억 원 규모), 나머지가 학술연구지원사업으로 학술지평가 및 정보화사업(약 19억 원 규모)과 국제학술교류사업(약 39억 원 규모), 그리고 학술연구지원정책 및 평가분석사업(약 2억 원 규모)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문학 지원과는 직접적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¹¹⁾

대부분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재단 자체사업과는 달

(단위: 백만 원)

표 2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
조성사업 예산현황
(2004년 수탁사업)

사업분야		2004 예산
우수 연구자 지원 (31,000)	선도연구자 지원	16,300
	신진교수 연구과제 지원	6,500
	박사 후 연수과정 지원	3,100
	학술연구교수 지원	3,900
	신진연구인력 지원	1,200
공동연구 과제지원 (47,200)	협동연구 지원	15,200
	중점연구소 지원	32,000
우수학술단체지원 (6,100)	국내학술지발행 지원	2,500
	국제학술지발행 지원	600
	학술대회개최 지원	3,000
기초학문 육성지원 (122,200)	기초과학 지원	29,200
	인문사회 지원	87,000
	보호학문분야 지원	5,600
지방대육성과제지원		7,000
대학원연구역량강화 (BK 21 특화분야)		4,500
합 계		218,000

자료: 학술진흥재단(www.krf.or.kr)의 경영공시 사업현황 항목 참조.

리 수탁사업의 대부분은 학술연구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약 24억 원 규모의 두뇌한국21(BK 21) 관리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표 2>와 같이 편성되어 있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학술진흥재단의 2004년 학술연구조성사업 가운데서도 인문학 지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사업은 기초학문 육성지원사업 가운데, 인문사회지원 분야를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학술진흥재단이 ‘학술진흥법’의 입 목적에 부응하여 전 학문분야를 균형적으로 지원해야만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박경하·전영평·이종수, 2002: 38).

물론 약 87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인문사회분야의 지원에 편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2001년까지 만해도 학술진흥재단의 인문 및 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각각 27억 6천여 만 원과 113억 7천여 만 원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¹²⁾ 고려한다면 매우 고무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기초학문 육성지원사업의 경우는 2002년부터 3년을 계획으로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지가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학술진흥재단을 통한 인문학의 지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국가 전체적으로 이른바 ‘이공계살리기’가 중요한 학문 및 교육정책의 목표로 부상하여, 학술진흥재단의 2004년 주요 사업추진방향으로 “이공계 대학연구소 지원 확대”¹³⁾를 명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비추어 본다면 학술진흥재단을 통한 인문학의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3) 한국학중앙연구원 및 기타 인문학 관련 정부기관

2005년 1월 29일 국회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1978년 개원 이후 한국학 연구기관의 역할을

담당해왔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받게 되었다. 설립 이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전통문화를 보다 깊이 연구하고 올바르게 이해하여 주체적 민족사관을 정립하고 조상의 빛난 업과 자주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서 새로운 문화창조와 민족증흥에 적극 기여”¹⁴⁾ 할 것을 주문하는 박정희의 개원 치사의 내용처럼 인문학 자체보다는 국학이나 한국학 연구의 본산으로서의 위상 속에서 설립되었다. 특히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1980년 한국학대학원을 설립한 이래 연구 및 연구지원기관이라기보다는 정부출연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새로 명칭을 개정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박정희에 의해 제기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설립목적이 지니고 있는 국가주의적 성격을 탈피하여 “한국문화의 심층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¹⁵⁾ 하겠다는 설립목적의 제시하고 있다. 이런 명칭의 변화를 통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연구 및 교육의 초점을 한국학으로 명백히 국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인문학 전반에 대한 공적 지원체제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더욱 힘들어진 측면도 있다.

그 외에도 존재하는 국공립인문학 관련기관으로는 문화관광부 산하의 국립국어연구원,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국사편찬위원회, 그리고 경상북도 산하의 한국국학진흥원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국립국어연구원은 1991년 설립된 국립연구기관으로 어문규범, 어문실태, 어문자료 등 주로 어문현상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 있고, 국사편찬위원회는 1946년에 이전의 조선사편수회를 개편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사료 조사, 수집, 보존, 편찬 및 발간을 통하여 국사연구의 심화와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재단법인인 한국국학진흥원도 이와 유사하게 국학자료의 조사 및 정리·보급과 전통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는 연구기관이라 할 수 있겠다(박경하·전영평·이종수, 2002: 24~26).

이 같은 사실을 비추어 봤을 때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포함한 국공립

표 3 ————— 국공립 인문학관련기관 현황(2005년 현재)

기관명	연혁 및 설치근거법	기관성격 (기관장)	주무부처	조직과 기능	주요 사업
국립국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4. 5 (문교부 학술원 부설연구기관) 1991. 1. 23 (정부조직법개정, 문광부 산하) 대통령령 제 13163호 (90. 11) 2004. 11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국립국어원으로 개칭) 	국립 연구기관 (6대 원장 남기심)	문화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3부 1과(언어정책부, 국어생활부, 국어진흥부, 기획관리과) 국어의 규범에 관한 연구, 보급 국어의 역사와 체계화에 관한 연구 국민의 언어생활 조사연구 국어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국어연구성과의 정리와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의 세계화 한자표준화 사업 국어어휘자료 처리 연구 국어순화자료집 발간 외래어, 외국어 사용실태 개선 국어학연감 발간 등
국사편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46 (국사관설치) 1949 (국사편찬위원회 회로개편) 1989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개정) 	국립기관 위원회 (8대 원장 이만열)	교육인적 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1부(편사부: 편사기획실, 연구편찬실, 사료조사실, 자료정보실), 1과(총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역사연구와 체계 정립 역사사료의 조사, 수집, 보존, 편찬 및 발간을 통한 국사 연구의 심화와 발전기여
한국학 중앙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8. 6. 30 설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육성법) 1980 (한국학대학원 설립) 2005. 1 (한국학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 개정으로 명칭 변경) 	정부출연 교육기관 (13대 원장 윤덕홍)	교육인적 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민족문화연구소 한국문화에 관한 인문, 사회과학적 연구 고전자료의 수집, 연구, 번역 및 편찬 국내외 학계와의 교류, 협력 한국학분야 연구인재 양성 현대사 연구 및 관련자료 수집,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원사업 연구사업 한국학정보화사업 장서각사업 국제교류협력사업
한국국학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5. 12 (재단 설립) 	지방자치단 체지원 재단법인 (3대 원장 심우영)	경상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교육연구부, 국학자료관, 유교박물관 사무국 국학연구의 종합기획 국학교육과정개발 및 전통문화 사상공육 국학관련 각종유물 유적의 체계적 조사, 보존,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학자료의 조사 정리 보급 전통문화 교육 실시, 교육내용 개발 자료관 및 박물관 운영 국학자료 및 연구결과 국제화 국학연구 종합계획 수립 국학연구자료 발간 및 보급

자료: 박경하·전영평·이종수(2002), "인문학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형성 연구," pp. 24~25의 표를 수정 보완함.

연구기관의 어느 곳도 인문학의 진흥 및 지원을 특화된 사업으로 갖추고 있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물론 인문사회연구회를 포함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의 학술연구진흥기관이 모두 공유하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인문학 지원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서 인문학 전담 지원기구의 설립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4. 인문진흥정책기구의 대안

현재 한국의 인문학이 직면해 있는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이 인문학 본래의 정신을 회복하는 내적 차원¹⁶⁾에서부터 국가의 (고등)교육정책이나 체계를 개편¹⁷⁾하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 이는 모두 인문학의 위기가 지니고 있는 총체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논의의 초점을 인문학 지원을 위한 공적체계, 즉 국가차원의 인문진흥정책기구의 수립에 맞추었다. 이를 위해서는 논의를 위한 준거의 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런 준거의 틀을 선진국의 인문진흥정책기구의 그 기능과 역할의 범위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안수립의 논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국의 공적 인문학 진흥체계는 그 역할범위의 정도에 따라, 그 지원의 대상을 인문학에만 국한하는 제한적 기관과 인문학 이외의 다양한 학문영역을 지원하는 포괄적 기관으로, 그리고 그 기능이 지원을 위주로 하는 지원형 기관과 정책 및 연구의 기능을 위주로 하는 정책·연구형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인문학에 대한 공적 진흥체계는 인문학 영역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주로 하는 제한적 지원기관형(영국의 AHRB¹⁸⁾나 일본의 인문·사회과학특별위원회¹⁹⁾), 인문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영역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하는 포괄적 지원기관형(미국의 NEH²⁰⁾

표 4
 각국 인문진흥정책기구의
 구분

기능 역할범위	지원/교육	정책/연구
제한적	제한적 지원기관형: AHRB(영국) 인사특위(일본)	제한적 정책·연구기관형
포괄적	포괄적 지원기관형: NEH(미국) 학술진흥재단	포괄적 정책·연구기관형: CNRS(프랑스)

와 한국의 학술진흥재단), 그리고 인문학만을 대상으로 하되 정책 및 연구기능을 핵심으로 하는 제한적 정책·연구기관형(현재 이런 형태의 인문학 진흥정책기구는 존재하지 않음), 인문학 및 학문의 전 영역을 포괄하면서 정책 및 연구의 기능을 위주로 하는 포괄적 정책·연구기관형(프랑스의 CNRS²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문학 진흥체계에 대한 분류기준을 근거로 한국에서 공적 인문학 진흥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물론 이런 기준에 입각하여 논의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는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존의 학술진흥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학술진흥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은 정치적·행정적 실현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을 지닌 대안이기 때문이다.

1) 기존 학술진흥체계 활용안

인문학 진흥을 위한 공적체계의 설립방안으로서 제안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대안은 기존의 학술진흥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대안이 지니는 최대의 장점은 정책의 정치적·행정적 실현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어떠한 형태가 되든 인문학 지원과 관련한

정책기구를 수립할 경우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 재원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기구의 설립자체가 곧바로 정책이슈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해관계집단들의 반대가 격심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학술진흥체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반드시 기구형성의 비용을 줄여 정치적·행정적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 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는 인문학과 관련한 기존의 학술진흥체계가 지니고 있는 한계가 지나치게 명백하고 뚜렷하기 때문이다.

인문사회연구회의 경우 그 위상이 연구기관이나 연구지원기관이라기보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원 및 관리기관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 차원에서 인문학 혹은 인문학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가 힘들어 보인다.²²⁾ 물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문사회연구회가 인문정책연구위원회를 통해 인문학의 위기 극복방안과 인문학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위원회가 실질적 정책대안개발이나 인문학 진흥지원 기능보다는 자문기관²³⁾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를 인문진흥정책기구로 확대·개편하는 데는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은 이미 인문학 진흥기관이라기보다는 한국학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학대학원과 부속연구소인 민족문화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인문진흥정책기구로 개편하는 것은 기존의 대학원과 교수중심의 편제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부담을 지니게 된다. 물론 기존의 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산하에 인문진흥정책기구를 두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오히려 지난 20여 년 이상 국학 혹은 한국학으로 연구영역을 특화시킨 전문적 연구 및 교육기관을 특성 없는 종합학술기구로 전락시키는 대안일 수 있다.

학술진흥재단의 경우도 이를 인문진흥정책기구로 활용하기에는 상

당한 한계가 있다. 학술지원의 중추기관의 위상을 지니고 있는 학술진흥재단은 바로 그와 같은 위상 때문에 특정 학문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학술진흥재단의 1986~99년의 총 연구비 2,331억 7천1백만 원의 학문분야별 지원현황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사회과학 20.4%, 이공학 65%에 비하여 인문학 분야에 대한 지원이 12.3%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이 같은 지원의 양상은 2002년 기초학문육성사업이 실시되면서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 사업이 한시적 사업이고 게다가 교육부가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수탁사업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술진흥재단을 통한 인문학의 안정적 지원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최갑수, 2003: 49).²⁴⁾

2) 지원기관형 인문진흥정책기구 설립안: 인문기금·재단 설치안

국가 차원의 인문학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로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기금이나 재단을 설치하여, 이를 통하여 인문학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금이나 재단을 설립하여 대학의 인문연구와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늘이면서, 지원대상 연구사업의 정책지향성이나, 연구추진기관들의 협동 및 연대화를 추진해나가는 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측면이나 지원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인문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와 인재양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안정적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착안한 대안이다(박경하·전영평·이종수, 2002: 64).

기금이나 재단을 통한 인문학의 지원은 영미식의 공적 인문학 지원 체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다. 1965년에 ‘예술·인문학 기금법’(National Foundation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 Act of 1965, P.L. 89~209)을 제정하여 예술과 인문학 지원의 근거를 마련²⁵⁾한 미국의 경우는 ‘국립인문재단’(NEH,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을 설치하여 미국과 미국령 내의 인문학과 예술의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및 장학재단의 설립·운영하고 있다. 고대 및 현대 언어, 문학, 역사, 법률, 철학, 고고학, 비교종교학, 윤리학, 예술비판론과 이론, 인문학의 연구방법·연구내용 및 인류의 문명 등의 분야를 망라한 인문학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NEH의 기금은 전문대학, 대학, TV와 라디오, 박물관, 도서관, 사료보관서 및 개별 학자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덕규, 2002: 26).²⁶⁾

영국은 1998년 10월 *Dearing Report*의 권고에 의해 AHRB(*Arts and Humanities Research Board*, 예술·인문연구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분산적으로 관리되던 인문학 및 예술분야의 고등교육기금을 능률적으로 재작동시키기 위해 조직된 이 위원회는 2003~4년 예산은 약 7천만 파운드(약 1,4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통해 ① 교부금 지급을 통한 연구과제의 지원, 연구년(*research leave*) 지원, 연구인원의 교류, 연구수상 지원, 연구센터의 지원, ② 대학원생의 장학금 지원, ③ 잉글랜드의 경우, 대학 내 박물관과 화랑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박덕규, 2002: 67~68; 박경하·전영평·이종수, 2002: 61~63).²⁷⁾

이처럼 인문학 지원을 위한 재단 혹은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현재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학문간의 공적 지원규모의 심각한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이미 지적했듯이 한국의 인문학은 자연과학 및 이공계 분야에 대비해 정부의 공적 지원에서 항상 우선순위가 상당히 뒤쳐지는 학문분야였다. 이는 1986년부터 2001년까지 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한 전체 연구지원비 3,129억여 원 중 6.9%에 지나지 않은 216억만이 인문학에 지원되었으며, 이를 어문학까지 확대하더라도 전체가 13%대에 머무르는 사실로도 잘 드러나고 있다(염재호·최호철, 2002: 22~23). 물론 최근 몇 해간 인문학 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인문학 지원이 증가되는 추세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순수하게 인문학 지원이라기보다는 기초학문육성사업의 형태로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되는 형태를 보여 인문학에 지원되는 재정의 규모가 질적으로 성장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교정하여 인문학에 대한 실질적 지원

이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비단 인문학기금 및 재단설립뿐만 아니라 대안적 인문진흥정책기구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인문학진흥기금 혹은 인문학진흥재단은 기존의 학술진흥재단의 인문학 연구지원 부문을 독립시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차원의 준비작업을 통해 설립될 수 있을 것이다.²⁸⁾ 재단이나 기금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① 인문학술 관련 연구와 교육, 학술활동 등의 지원, ② 인문학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지원, ③ 인문학술 관련 학문 후속세대 육성지원(장학금), 4) 대학 및 대학 외 인문학연구소 연구비 지원, ④ 학술문헌 번역지원(국문학의 외국어 번역, 고전의 현대어 번역 등), ⑤ 인문학 연구전담교수 채용, 대학·인문학연구소의 연구과제 개발 및 연구, 국제교류 활동을 촉진하며, 인문학의 실용성을 증대시키는 핵심적 사업으로서 학제적 연구추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박경하·전영평·이종수, 2002: 66).

3) 정책·연구기관형 인문진흥정책기구 설립안: 인문정책연구원 설립안

지원기관형 인문진흥정책기구 설립안은 기금이나 재단의 설립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인문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그 자체가 인문학이 처한 현재의 위기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수단을 수립하는 정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현실적으로 현재 점점 수요가 감소하는 대학을 제외한 적절한 연구단위가 존재하지 않는 인문학 연구자들에게 직접적 연구의 장을 마련하여 그들에게 지속적 연구의 전망을 준다는 차원에서도 기금이나 재단으로 수용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염재호·최호철, 2002: 43).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시 인문학 지원에 투입된 기존의 재원을 바탕으로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인 (가칭)인문정책연구

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기구는 설립 초기에는 주로 인문정책상의 중요 과제인 인문학 연구와 대학 교양교육의 강화, 대학개혁에 있어 인문학 중심의 학부교육과 전문직업 중심의 대학원 교육제도의 정립방안, 인문학 후속세대와 강사제도의 개선, 사회윤리의 재건방안, 인문학 계열 졸업생의 취업기회 확대, 인문연구와 지식산업의 연계 등의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정책연구기구의 성격을 지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인문학의 급박한 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이후에는 이 기구를 통해 중·장기적인 인문연구사업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더욱 장기적으로 대학이나 대학의 연구소를 통한 연구소로는 충족되지 않는 특정·회소 연구주제에 대한 인문학 자체의 연구기관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박경하·전영평·이종수, 2002: 67~68).

국가적 차원의 정책 및 연구기관을 통해 인문학 진흥을 추진하는 방식은 국립학술연구원(CNRS, *Centre Nationale des Recherches Scientifiques*)이라는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인문학을 포함한 기초학문을 육성하는 프랑스의 학술지원정책에서 발견된다. 1939년 알베르 르블렁(Albert Lebrun) 대통령의 칙령으로 설립된 CNRS는 초기에는 기초 자연과학의 지원을 1차적 목표로 삼았다가 현재는 모든 학문분야를 포괄하는 연구기관으로 전환되었다. 1982년 개정된 칙령에 따르면 CNRS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니고 있다.²⁹⁾

- ① 국가의 경제, 사회 및 문화의 발전뿐만 아니라 과학발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모든 연구프로그램의 수행, 감독 및 평가의 사명을 지닌다.
- ② 연구결과물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데 기여한다.
- ③ 프랑스어 사용에 혜택을 줌으로써 과학적 정보를 발전시킨다.
- ④ 연구와 연구에 의한 연수와 교육에 경쟁력을 키워나간다.
- ⑤ 이 분야의 국가정책구성을 목표로 변화에 대한 전망과 국내외 학문현황의 파악과 분석에 참여한다.

핵과 입자물리학, 수학, 학문과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엔지니어를 위한 학문, 화학, 우주학, 인간과 사회의 학문(8개 분야), 40개의 분과(*sections*)와 핵물리학과 입자물리학연구소와 우주과학연구소(2개)로 구성된 CNRS에서 30부터 40까지 분과가 인문사회학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이 10개의 인문사회학 분과에는 2002년 현재 463개의 연구팀이 소속되어 2,160명의 연구원과 1,752명의 엔지니어 및 기술행정요원이 23,018,000유로 규모의 총예산으로 활동하고 있다(박덕규, 2002: 94~95). 그뿐만 아니라 기존에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었던 학술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여, 명실상부한 국가적 학술연구 및 정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³⁰⁾

CNRS의 인문학 지원체제와 그 역할에 비추어 봤을 때 한국의 (가칭)인문정책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인문학 관련 대학과 연구소 등을 연구 네트워크로 묶어 이들이 연계하고 협동하여 연구하도록 지원한다. 둘째, 인문학이 모든 학문의 기초학문으로 정초하도록 각급 교육과정과 교과내용을 개선하고, 인문학 전공자들에 대한 수요와 공급체제 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수행한다. 셋째, 각종 인문관련 지표개발, 지식기반사회의 사회윤리 형성, 고전번역, 디지털 인문연구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인문정신을 고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 넷째, 인문학 연구결과에 대한 종합평가기능을 담당한다. 학술진흥재단 등 인문연구지원기관 및 국가 인문학 연구개발비 지원에 대한 중립적 평가기능과 함께 지원대상 인문 연구성과의 평가기능을 수행한다. 다섯째, 국가적 투자가 필요한 부문에 대한 인문학적 시각의 분석연구 및 인문학 진흥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학제적 협동연구를 통하여 선도적 성과를 제시한다. 여섯째, 인문학 관련 회소영역의 연구작업을 직접 추진하는 한편, 그러한 영역의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일곱째, 인문학자의 연구원 Pool제와 회귀연구자료 및 시설 공동이용제도 구축과 정비이다(박경하·전영평·이종수, 2002: 69~70).

물론 국가차원의 인문정책 및 인문학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상당한 초기투자를 필요로 하고, 또 그런 이유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을 경우 실현하기 쉽지 않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새로운 국가 연구기관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을 비롯한 인문학 관련 국책연구 및 교육기관이나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의 인문학 연구기관과의 갈등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안의 실현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선진국의 인문학 진흥체계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제한적 정책·연구기관형의 인문진흥정책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현재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연구기관의 하나인 한국법제연구원과 같이 약 20~30명 가량의 연구진과 최소한의 관리직원으로 구성된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인문정책상의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인문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제안하는 정책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면 재원의 확보나 타 기관과의 갈등 등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보인다.³¹⁾ 이러한 대안은 또 현재의 인문사회연구회 산하에 인문학 관련 연구기관이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정책·연구기관형의 인문진흥정책기구는 어떤 형태를 취하더라도 국가기관으로서 인문정책연구원이 어떤 법적 위상을 가지며,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독립적 인문정책 및 인문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무엇일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연후에 구체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비록 이 대안이 국가의 인문정책 혹은 인문학 연구의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인문학 위기 타개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는 하더라도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않고서는 인문학이 지니고 있는 학문적·현실적 효용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판이 사라진 인문학은 이미 인문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5. 마치며

인문학을 공적 지원체계를 통해 진흥하려는 시도는 단지 인문학이 처해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인문학은 어떤 의미에서 그 존재의 의미가 현실의 세계와 지속적으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데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일상적으로 위기의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을지 모른다. 다만 그 위기가 보이는 것, 유용한 것,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의 가치가 현실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져 보일 뿐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문학은 오히려 그 본연의 임무, 즉 이러한 현실의 변화가 낳을 수 있는 파국적 결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경고함으로써 그 위기를 극복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쓸모가 없어 보여도, 당장 써먹을 수 없어 보여도 중요하고, 세계의 존재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인문학의 위기뿐만 아니라 문명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인문학이 감당해야 할 책무가 이토록 무겁고, 막중하다는 것은 인문학에게만 인문학의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적절한 공적 지원체계를 통해 인문학이 그 본래의 정신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밝혀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문진흥정책기구의 형성은 이러한 견지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인문진흥정책기구의 대안에 대한 논의는 사실 이미 서구의 선진제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공적 인문학 지원체계를 기본적 틀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다 구체적 정책대안으로 정교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의 인문학 지원체계에 대한 더 세밀한 연구와 비교·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안을 한국의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나 정치적·

행정적 실현가능성 등의 현실적 타당성에 대한 논의도 더욱 치밀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 차원의 논의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국가가 인문학이 지니고 있는 공공적 의미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적어도 이공학계열이나 영화 등 영상매체에 대한 지원만큼은 중요하다는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사회적 합의를 얻는 것이다. 이런 일은 그러면 누가 할 수 있을까? 다시금 인문학의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 주

- 1) 이 논문은 “인문사회연구회 2004년 인문정책 연구사업”으로 수행된 과제인 <선진국 인문학 진흥체계와 한국 인문정책 연구기관 운영방안>에 기초하고 있다.
- 2) 이러한 결정은 그 자체로도 충격을 주었지만,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의 심각성 때문에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서울대 인문대는 그 전해 입시에서 언어학과와 종교학과를 제외한 13개 분야에서 지원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였다(《매일경제》, 2002. 11. 20.).
- 3) 비슷한 맥락에서 조지형은 인문학이 지금까지 자신의 소리를 어떻게 내어왔는지 검토하고, 앞으로 어떻게 낼 것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한다. 아무런 비판적 사유 없이 이른바 보편적·객관적·절대적 가치에 맹종하여 이를 통해 오늘과 내일을 재단하려는 것은 오늘의 인문적 사유와 내일의 인간적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위기”는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있다(조지형, 2001: 193~194).
- 4) 특히 기존의 학과제가 지닌 지나친 학문간의 세분화와 이로 인한 학문간 의사소통의 부재, 그리고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의 자율성 침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도입된 학부제는 한국적 현실과 유리되어 인문학을 비롯한 기초 학문분야의 지원학생 감소와 더 나아가서는 해당 학문 및 학과의 존폐문제를 유발한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박영근, 1999: 115~122).
- 5) ‘공재’(public good)란 잘 알려져 있듯이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져 축적되지 않으면서도, 어느 누구도 그것의 소비로부터 배제될 수 없고(비배타성), 다른 사람의 소비로 인해 나의 소비가 지장을 받거나 소비에서 얻는 효용이 감소하지 않는(비경합성) 속성을 지닌 특수한 유형의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최병선, 1992: 76~80). 물론 인문학 역시 이 같은 측면에서 공공재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문학의 경우도 그 누구도 그것의 소비로부터 배제될 수 없으며, 타인의 소비로 인해 나의 소비가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재는 이런 차원뿐만 아니라 공공정책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바람직한 상태’ 혹은 공공정책의 집행을 통해 기대하는

- 효과의 차원에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재의 범위는 사회적 가치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최병선, 1992: 80~82). 이 논문에서는 인문학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바로 이런 차원에서 규명하려 한다.
- 6) 민간영역에 대한 최소한의 정부개입을 원칙으로 삼아온 미국도 최근 인문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1965년 인문학 분야의 연구, 교육, 보존, 그리고 공공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연방 정부의 기부금 조성을 위해 NEH(*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를 설치한 미국은 1982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대통령 예술 및 인문학 위원회'(The President's Committee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를 구성하여 인문학 분야에 관한 연방정부 차원의 공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1997년 대통령에게 인문학 및 예술정책의 기본방향이 담겨있는 *Creative America*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번영하는 문화가 생기 넘치는 사회의 핵심적 요소"이며, "예술과 인문학의 창조적 힘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한다"고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예술과 인문학은 명백히 '공공재'로서 인식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Creative America, The President's Committee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 1997*).
 - 7) 라틴어의 'humanitas'가 처음으로 쓰인 것은 기원전 55년 키케로(Cicero)의 《옹변가에 관하여》(*De Oratore*)가 처음이라고 한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humanitas'라는 단어는 옹변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키케로에게 옹변가는 단지 옹변을 위한 언어적 기술만을 습득한 자가 아니라, 실천적 지성을 갖춘 종합적 지식인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키케로는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지성을 지향할 수 있는 이상적 인간으로서의 옹변가는 철학의 실용성과 지성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해 언어적 표현력을 반드시 갖추어야만 한다고 보았고, 또 언어의 능력이 인간을 다른 존재와 구분해 주는 특성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를 인간의 본질 즉 'humanitas'의 핵심으로 보았다고 한다(박찬길, 2001: 22~23).
 - 8) 이러한 논리는 현실적으로도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 영상을 이용한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출판 등의 문화산업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를 뒷받침할 소재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박경하·전영평·이종수, 2002: 18).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31조에 의해 상상력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콘텐츠의 창작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립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이러한 논리를 정책적·제도적 차원에서 구체화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www.kocca.or.kr 참조).
 - 9) 이와는 다른 차원이지만 목진휴는 인문학이 지니는 중요성을 공공정책의 과정에서 인문학의 기여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밝혀내려는 시도를 하였다. 기존의 정책사례 분석을 통한 이 연구를 통해 목진휴는 인문학이 지니는 상호이해와 인식의 공유 등의 학문적 요소가 정책의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목진휴, 2002).
 - 10) '인문정책연구위원회'가 설치된 2002년 48개의 연구과제와 각 3차례의 심포지엄과 포럼, 1차례의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진 인문정책연구사업은 그러나 2003년에는 단 7개의 정책과제만이 수행될 정도로 규모가 축소되었고, 예산의 규모도 4억 수준으로 대폭 삭감되었다(인문사회연구회의 홈페이지, www.kchsri.re.kr의 경영정보공시 항목을 참고).
 - 11) 학술진흥재단의 예산현황은 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www.krf.or.kr)의 경영공시 항목을 참고하였다.
 - 12) 이는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지원통계연보》에 근거한 수치이다. 이 논문에서는 박경하·전영평·

이종수(2002)의 연구결과를 재인용하였다.

- 13) 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www.krf.or.kr) 경영공시 사업현황 항목을 참조하였다.
- 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홈페이지(www.aks.ac.kr)의 설립목적 항목에서 인용하였다(2004년 11월).
- 15)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www.aks.ac.kr)의 설립목적 항목에서 인용하였다(2005년 4월).
- 16) 김우창은 인간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인간에 대한 정보가 유례없이 확대되는 판국에 인문학이 위기를 느끼는 까닭을 인간과 그 활동 사이에 존재하는 불균형과 소통차단, 혹은 간단히 말하여 사람 사는 일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이 어지럽게 된 데서 찾고 있다. 그는 또 이렇게 정신이 없게 된 상황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혹은 정신이 만들어 놓은 것들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관점에서라면 해결책은 “정신을 차리는 일”이라고 한다(김우창, 1999: 6~7).
- 17) 가령 김동노(2002)의 경우는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서 전공편제의 개편, 교과과정의 개편 등의 고등교육정책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48~75).
- 18) 영국 역시 최근까지 인문학 지원을 위한 공적지원체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이후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기면서 1998년 Dearing Report의 추천에 의하여 인문학과 예술을 지원하는 기구를 설립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영국학술원, 잉글랜드 고등교육재정위원회 등이 공동출자하여 AHRB(*Arts and Humanities Research Board*)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AHRB는 현재 매년 7천만 파운드의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으며, 보다 강력한 집행력의 확보를 위해 AHRC(*Art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로의 승격절차가 진행중이다(*Annual Report*를 비롯한 AHRB의 각종 자료를 참고함).
- 19) 일본의 인문·사회과학특별위원회는 1990년대 이후 대학 구조조정계획이 발표되면서 제기되었던 일본 학계의 인문학 위기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자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제도적 대응의 한 방편으로 설치된 임시기구이다. 현재 문부과학성 산하에서 활동하는 이 기구는 인문학 진흥을 위한 정책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개시한 상태이나, 향후의 구체적 전망이 불분명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立川明, 2002; 長谷川眞理子·西脇与作·林邦夫, 2001; 土田友章, 2001; 科學技術·學術審議會學術分科會編, 2002. 6. 11.).
- 20) 미국의 경우는 인문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각종 재단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비중도 상당하지만, 공적 차원에서의 인문학 지원은 NEH(*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21) 프랑스 국립학술원 CNRS(*Centre National des Recherches Scientifiques*)는 제 2차 세계대전 초기인 1939년 알베르 르블링(Albert Lebrun) 대통령의 칙령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기초학문분야 및 응용학문분야의 국가 연구기관들을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여 전 국가적 차원에서 상호협력을 가능하게 할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CNRS 홈페이지 기관소개 참고, www.cnrs.fr).
- 22) 인문사회연구회가 지닌 이런 한계는 2003년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소속 위원 정형근에 의해 제기된 질의의 내용, 즉 “연구회가 4년 동안 산하 연구기관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히 정부를 대신하여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소극적 관리와 평가에 치우쳤다는 지적”에서도 반영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2003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회의록”(부록): 88).
- 23) 현재 인문정책연구위원회의 기능은 ① 인문정책연구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 ② 인문정책연구

- 사업 운영상의 주요 방침 및 추진사항 심의, ③ 연구과제 공모, 심사, 선정 및 연구결과 평가, ④ 기타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으로 되어 있다(인문사회연구회의 홈페이지 www.kchsri.re.kr의 연구회 활동 항목 참고).
- 24)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원이 지니는 이러한 한계는 비단 인문학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학문분야에 공통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 이유는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원이 대부분 수탁사업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갑수에 의하면 ‘학진’의 사업은 과학재단과 달리 기금이나 출연금 등 안정적 재원을 기반으로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교육부의 학술연구조성비 보조금에 의거한 수탁사업이고, 이러한 재원의 불안정성과 그에 따른 ‘학진’의 자율성 미약이 학술진흥의 취지를 십분 살리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최갑수, 2003: 49~50).
- 25) 이 법의 제 2절은 “예술과 인문분야는 미국 전 국민에게 해당된다”고 하면서, 그런 이유로 “연방정부는 지방, 주립, 지역, 그리고 민간조직에 의해 인문과 예술분야의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충하고 지원,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여 예술 및 인문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밝히고 있다(박덕규, 2002: 27).
- 26) NEH는 이외에도 일반인들에게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지원하기도 한다. 이는 2004년부터 실시된 “We, the People” 이라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시작되었는데, 이는 “미국인들의 자신의 역사에 대한 평균적 이해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문제의식에서 대통령인 부시가 직접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NEH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맡아달라고 부탁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이 이니셔티브는 물론 9.11테러 이후 미국의 국수주의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측면도 있으나, 인문학의 대중적 기반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김동노, 2002: 18~19). 참고로 이 이니셔티브의 예산은 2004년 약 980만 달러에서 2005년 약 3,300만 달러로 증액되었다. 2005년 NEH의 전체 예산은 약 1억 6,200만 달러로 책정되어 있다(NEH 홈페이지 <http://www.neh.gov>의 예산항목 참고).
- 27) AHRB는 고등교육재정위원회, 즉 잉글랜드 고등교육재정위원회(HEFCE), 스코틀랜드 고등교육재정위원회(SHEFC), 웨일즈 고등교육재정위원회(HEFCW)와 북아일랜드의 고용교육부(DEL), 그리고 영국학술원(British Academy)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를 띤 자선기관이다(박덕규, 2002: 68; 전영평 외, 2004). 따라서 영국의 AHRB는 조직적 측면에서 순수한 형태의 기금이나 재단이라고 하기보다는 기금관리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영국 정부가 2001년 AHRB를 연구위원회로 승격시키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심의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만들었고, 조사위원회는 정부에 AHRB를 연구위원회(Research Council)로 승격시키고 이를 다른 연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부의 관리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했다는 사실도 적어둘 필요가 있다. 영국정부는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수용하여 2003년 1월에 2005년까지 AHRB를 AHRC로 승격시킬 것이라고 발표하였다(전영평 외, 2004).
- 28) 물론 이 경우에 인문진흥정책기구의 성격은 제한적 지원기관형이 될 것이다. 포괄적 지원기관의 성격을 띠는 기금이나 재단은 이미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존재하고 있고,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한국학술진흥재단을 확대 강화하여 인문학의 위기해소 및 인문학 진흥을 도모하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 29) 1982년 11월 24일 수정된 CNRS 칙령(勅令).

- 30) 2004년 3월 1일 발표된 “프랑스국립학술원(CNRS)을 위한 우리들의 개혁계획안”을 참고하였다. CNRS의 원장과 사무총국장인 제라르 메지와 베르나르 라투튀루에 의해 작성된 이 개혁계획안의 전문은 전영평 외(2004), “선진국 인문학 진흥체계와 한국 인문정책 연구기관 운영방안”에 실려있다.
- 31)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함으로써 국가의 입법정책수립을 지원하고,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과 아울러 법률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서, 2004년 현재 25명의 연구진과 5인의 관리직원으로 구성되어, 약 41억 9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의 연구원소개 항목, www.klri.re.kr). 이 정도의 인적 규모와 예산수준이라면 재원의 확보나 설립과정에서 타 기관과의 갈등 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헌

- 국회 정부위원회, 2003. <2003년도 국정감사 정부위원회 회의록(부록)>.
- 교육부, 1999. “두뇌한국 21 인문사회분야 재공고 및 후속 보완대책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998. “영국 공공연구부문 자금지원체계 및 공공연구기관의 구조조정,” 정책자료 98-14.
- 기초학문육성위원회, 2001. “기초학문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2001. 3.
- 김남두, 1995. “인문과학의 성격과 한국 인문학의 과제,”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 <인문과학의 이념과 방법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남두·심경호·장춘익 외, 2001. “인문학 진흥방안에 관한 연구.”
- 김동노, 2002. <인문학 활성화를 위한 학술정책 연구: 한국학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인문사회연구회 인문연구정책총서 2002-03.
- 김우창, 1999. “새로운 세기를 위한 인문과학: 인문과학의 코기토,” 전국대학 인문학연구소협의회, <21세기 대학교육과 인문학의 전망>, 도서출판 역락.
- 김종숙, 1999. “한국 인문학의 위기-신지식인 운동과 관련하여,” <은지논총> 제 5권.
- 김진나·박주식, 1999. “인문학의 위기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사유틀’ 모색,” <비평과 이론> 제 4권 제 1호.
- 도정일, 1999. “새로운 인문학의 전망-인문학의 미래-몇 가지 모색,” <인문학연구> 제 3집.
- 목진휴, 2002. <공공정책과정에 대한 인문학의 기여에 관한 연구: 효율성과 인간성의 조화를 중심으로>, 인문사회연구회 인문연구정책총서 2002-04.
- 맹광호 외, 1995. “한국 연구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비교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 박경하, 2002. “인문콘텐츠와 인문정책의 방향,” <인문학의 새로운 방향 모색>, 중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심포지움 자료집, 12. 4.
- 박경하·전영평·이종수, 2002. <인문학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형성 연구>, 인문사회연구회 인문연구정책총서 2002-49.

- 박덕규. 2002. 《국내의 인문학지원체제 비교연구》, 인문사회연구회 인문연구정책총서 2002-48.
- 박덕규 · 이종태 · 정영순 · 이종수. 2000. “한국 인문학의 발전방안,” 인문사회연구회.
- 박상대 외. 1996. “한국학술진흥재단발전장기계획: 대학의 기초연구진흥을 위한 재단의 역할과 지원방향,” 한국학술진흥재단.
- 박영근. 1999. “대학교육 개혁의 현황과 문제점: 정부 주도의 교육개혁이 대학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 전국대학 인문학연구소협의회, 《21세기 대학교육과 인문학의 전망》, 도서출판 역락.
- 박찬길. 2001. “정보시대와 인문학의 위기: 서양인문학의 이념과 과학주의의 도전,” 김도훈 외, 《디지털시대의 인문학, 무엇을 할 것인가》, 사회평론.
- 배규환 외. 1998. “인문·사회계열 학술진흥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 손영식. 2001. “한국사회에서 인문학의 위기,” 《철학연구》 제 78집.
- 심광현. 1997. “21세기 인문학의 발전방향,” 《현대사회의 인문학: 위기와 전망》, 중앙대 인문과학연구소.
- 염재호 · 최호철. 2002. 《한국 인문정책의 변동과정 및 정책과제》, 인문사회연구회 인문연구정책총서 2002-07.
- 이동철. 1999. “위기와 모색-세기말 인문학의 위상과 전망,” 《사회비평》 제 22호.
- 이상엽. 2001. “인문학 위기극복을 위한 하나의 제안-문화인문학,” 《철학과 현실》 50권.
- 이성원. 1995. “인문학의 특성, 인문학의 위기,” 인문과학연구소 편, 《인문과학의 이념과 방법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이영호 · 김주창 · 진영중 · 김범찬. 2003. 《대학 인문교양교육의 현황진단 및 정책대안》, 인문사회연구회 인문연구정책총서 2003-04.
- 이왕주. 2001. “기초학문의 위기와 그 극복의 철학: 소통 인문학의 무늬,” 《범한철학》 제 23권.
- _____. 1998. “인문학의 몰락을 바라보며,” 《철학과 현실》 제 37권.
- 이종수. 2002. 《한국인문학술정책론》, 동아사.
- _____. 2002. “인문사회연구회가 인문정책연구를 매년 수행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의 근거,” 인문정책지원팀 내부자료.
- _____. 2002. “한국인문정책의 개념틀: 연구대상과 범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 _____. 2002. “한국 인문학문의 ‘위기’와 정책적 대응방향,”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 _____. 2001. “한국 인문학문후속세대 지원정책과제,” 《중앙행정논집》 제 15권 제 1호.
- _____. 1999.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 실태와 제도개선 방향,” 《국회보》 제 399호.
- _____. 1998.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학술진흥방안에 관한 연구,” 《고등교육연구》 제 10권 제 1호.
- 이주향. 1999. “신유목 시대와 인문학의 위기,” 《철학과 현실》 제 41권.
- 인문사회연구회. 2002. “한국인문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 1회 인문정책심포지엄 자료집, 6. 14.
- 임기중. 1998. “인문학의 위기극복을 위한 학술단체의 역할,” 《국어국문학》 제 122권 제 1호.
- 임재진. 2001. “‘인문학 위기’ 담론의 실제와 그 반성,” 《동서철학연구》 제 21집.
- 전국대학인문학연구소협의회. 1999. “정보지식사회와 인문학.”
- 전영평 외. 2004. 《선진국 인문학 진흥체제와 한국 인문정책 연구기관 운영방안》, 인문정책연구총서 2004-05.

- 전택수. 2001. "인문학과 사회생산 함수," 인문사회연구회·전국대학인문학연구소협의회, 《인문학의 경제적 가치와 생산성》.
- 정선양. 1999. "독일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조동일. 1999. "인문학연구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인문학연구 이대로 좋은가>, 인문사회연구회 심포지엄 자료집, 12.
- _____. 1997. 《인문학의 사명》, 서울대 출판부.
- 조배숙. 2004. "국회교육위원회 서울대학교 국정감사 질의서," 2004. 10. 18.
- 조지형. 2001. "인문학의 '위기'와 디지털 인문학," 김도훈 외, 《디지털시대의 인문학, 무엇을 할 것인가》, 사회평론.
- 천정미. 2002. "지식기반사회와 교육: Peter Drucker를 중심으로," 《교육철학》 제 22집.
- 최갑수. 2003. "학술진흥정책의 현황과 개혁방향," <노무현정부의 학문정책 개혁과제 토론회 자료집>, 문화연대 등 주최, 2003. 4. 18.
- 최병선. 1992. 《정부규제론》, 법문사.
- 최재목. 2000.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철학적 성찰," 《인문연구》 제 38집.
- 한승동. 2001. "인문학의 위기극복을 위한 반성과 대책-대학 교양과정에서 철학의 역할," 《동서철학연구》 제 21집.
- 한영환·임천순·김남두·이종수. 2001. 《인문학진흥을 위한 연구추진체제》, 인문사회연구회.
- 허병기·서정현·이종수·김민조. 1999. "학술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정보 조사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 홍성욱. 2000. "실용성 콤플렉스 벗어나야 인문학이 산다," 《신동아》, 2000년 4월호.
- 황성돈. 2000. "지식정부의 미래 모습과 정책과제," 《한국행정연구》 제 9권 제 1호.

〈매일경제〉

- 科學技術·學術審議會學術分科會編. 2002. "人文·社會科學の振興について," 文部科學省報告書, 2002. 6. 11.
- 立川明. 2002. "アメリカ合衆國での人文學の復興と日本の戦後高等教育改革," 《教育研究》, 國際基督教大學教育研究所.
- 土田友章. 2001. "大學教育の倫理-人文學の視点から," 《社會と倫理》, 南山大學社會倫理研究所.
- 長谷川眞理子·西脇与作·林邦夫. 2001. "人文學教育のあり方をめぐって," 《ソフィア》, 上智大學.
- AHRB. 2003. *The Art and Humanities: Understanding the Research Landscape* (November, 2003).
- _____. B. 2001. *Annual Report 2000/2001*, Arts and Humanities Research Board.
- _____. 2001. *Review of Arts and Humanities Research Funding: Report of the Steering Group to Education Ministers*, Arts and Humanities Research Board.
- _____. Strategic Plan (2004~2009).
- _____. Corporate Plan (2000~2005).

_____. Guide to Awards(Autumn 2003~Autumn 2004).

_____. *Annual Report*, 1998/1999.

_____. *Annual Report*, 1999/2000.

_____. *Annual Report*, 2000/2001.

_____. *Annual Report*, 2001/2002.

_____. *Annual Report*, 2002/2003.

CNRS. 2003. *Rapport de la Directrice Generale sur L'activite du CNRS en 2002*, Conseil D'Administration.

_____. 2000~2003. *Le Journal du CNRS*, 2000~2003.

_____. 1988. *Cahiers Pour L'Histoire du CNRS*, 1939~1989, Ed. du CNRS.

The President's Committee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 1997. *Creative America Unef-10*, Retrait de la Reforme BAYROU de Destruction de L'enseignement Superieur Public(<http://socialisme.free.fr/cps68-universite.htm>).

Unesco. 1978. *Main Trends of Research in the Social and Human Sciences*, Mouton.

<http://www.iloveguro.or.kr> (이인영 국회의원 홈페이지).

<http://www.kchsri.re.kr> (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

<http://www.kocca.or.kr>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lri.re.kr>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rf.or.kr> (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

<http://www.neh.gov> (NEH 홈페이지).

<http://www.cnrs.fr> (CNRS 홈페이지).

11. The Logic for a Necessity of a Governmental Humanities Promotion Organization in Korea and a Suggestion for an Efficient Formation

Lee, Byung-Ryang · Chun, Young-Pyoung

In recent, there has been an argument that humanities face a deep crisis and therefore they require governmental support. The fact that any academic field meets a crisis, however, does not necessarily justify governmental intervention. Provided this doubt, the argument needs more concrete rationale and this paper attempts to find it. One reason that could justify the governmental sponsorship for humanities would be that the humanities are beneficial for the "public good." Hence, this paper will delineate the humanities' traits as the public good. Then, to suggest proper public intervention for the promotion of humanities, I will examine the present public intervention and support systems. And finally several government-supportive institutional alternatives are suggested for the future humanities promotion policy of Korea.

Key Words : Humanities, Crisis of Humanities, Humanities Promoting Policy, Public Good